

‘한 치 앞만 본’ 정부 소방행정 실효성 의문

소방서 인근 교차로에만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첫 교차로 통과 후 체증...긴급출동 취지 무색

광주 7곳·전남 5곳 4월부터 운영...지역별 교통상황 고려안돼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재나 구급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검토 없이 ‘타상행정’식으로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소방안전본부는 4월부터 소방서 앞 교차로에 긴급 출동차량의 도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출동신호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가 신호등 주변에 설치된 제어기를 통해 신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화재진압차나 구급차 등이 긴급 출동할 때 신호등이 5~20초 뒤 주행 신호로 자동 전환되는 만큼 현장까지 접근 시간이 빨라지게 된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효율적 현장 접근이 가능해져 ‘골든 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서구 3개소(금호·상무·풍암) ▲남구 1개소(월산) ▲북구 2개소(임동·두암) ▲광산 1개소(월곡) 등 7개 119안전센터 앞에 설치되고 전남에서는 ▲목포 1(삼악) ▲여수 1(소방정대) ▲순천 2(저전·연향) ▲강진 1(강진소방서) 등 5곳 소방서 앞 교차로에 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 한 대당 1350만원씩, 전체 1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시작하기전부터 예산낭비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장,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 측은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소방서별 평균 출동 시간과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거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효율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 채택하기는 커녕, 소방서에서 무선으로 신호 조정이 가능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방서와 교차로간 거리가 시스템 선정 대상이 됐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1010건의 화재 중 ‘골든 타임’인 5분 이내 도착한 경우는 689건(68.22%)에 그쳤고 ▲10분 이내(228건·22.57%) ▲20분 이내(79건·7.82%) ▲30분 이내(14건·1.39%) 등 도착 시간을 고려하면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94.7%인 월산 센터에 비해 69.7%인 두암 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했다는 얘기다.

소방서가 신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교차로 한 곳만을 우선 선정, 이외 다른 교차로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임동 센터의 경우 30m 떨어진 무등경기장 사거리 교차로만 신호 제어가 가능해 300m 뒤에 설치된 경선여고 사거리 교차로를 제어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이 구간 교통 체증을 고려하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에서도 소방대원들은 “신호시스템이 2개 이상 교차로에 적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일단, 신호제어시스템을 시행한 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모의훈련. 광주시 북구 임동 119 안전센터를 출발한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가는 동안 사이렌과 경적을 울려도 앞서가던 차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아찔한 모습이 연출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알고도...

한수원, 관막음 허용률 상향 추진 강행

“주민 동의 약속도 안지켰다” 환경단체·주민 반발 잇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의 관막음 허용률을 상향시켜 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광주 일부 4일자 1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 영광 지역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원안위 측이 관막음 허용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된 사항인데도 주민 동의와 관계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영광수협대책위는 4일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상향 신청을 원안위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한수원과 원안위를 상대로 허가 반대 운동 전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어 “잇따른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한수원 측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된 ‘관막음 허용률 상향’을 요청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계 기준치 이상

으로 결함이 발생한 세관을 막아버린 뒤 원전 가동을 할 경우 원전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빛 3~4호기 관막음 허용률이 설계 당시 기준치인 8%에 근접하자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원안위에 관막음 허용률 상향 신청을 담은 ‘원전 운전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10월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 당시, 관막음 허용률 상향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수원 측이 점검 중이던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미세한 크기의 이물질(쇠조각) 85개를 확인했으며 관막음 허용률 상향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한빛 3~4호기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한 그린피스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서구에서는 이미 사용을 중단한 부실 자재로 만들어진 점을 지적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촉구했는데도 무리하게 관막음 허용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원안위와 한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창생? 알고보니 주간지 구독 사기

전국 동창회 카페 가입 명단 빼내

1만8000명에 15억원 쟁겨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초중고 동창생 행사를 하며 인터넷 동창회 카페 회원에 접근, 주간지 구독을 권유한 뒤 구독료 15억원을 받아 쟁긴 정모(4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를 도운 이모(37)씨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무안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 인터넷 카페 모임 회원 김모(55)씨에게 동창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주간지 1년 구독료 명목으로 18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 걸쳐 1만8000명에게서 15억원을 쟁긴 혐의다.

정씨 등은 전국의 초·중·고교 동창회 카페에 가입, 동창생 명단을 빼내 뒤 “아들이 잡지사 취직했는데 정기자 시험에 통과하려면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1인당 구독료 18만~20만원을 받아 쟁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인터넷 동창회 카페 7000곳에서 22만명의 명단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금연구역 흡연 두달새 130건 적발 음식점 2건...PC방은 무려 128건

금연법 확대 시행으로 금지된 PC게임방 내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뒤에도 적발되는 흡연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5개구가 올 들어 2개월간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단속을 벌인 결과, ▲

동구 11건 ▲서구 31건 ▲남구 8건 ▲북구 52건 ▲광산구 28건 등 모두 130건을 적발했다. 한 번 적발될 때 과태료를 10만원에 부과하는 만큼 2개월간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다.

특히 전체 적발건수의 98.5%(128건)가 PC게임방 내 흡연행위로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점 내 흡연행위는 2곳에 불과했다.

다만, 흡연 행위에 대한 업주 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들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반 업주들의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자치단체들은 PC게임방의 경우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다보니 성인 흡연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데다, 커피숍·음식점에 비해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점 때문에 적발되는 흡연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홍보·계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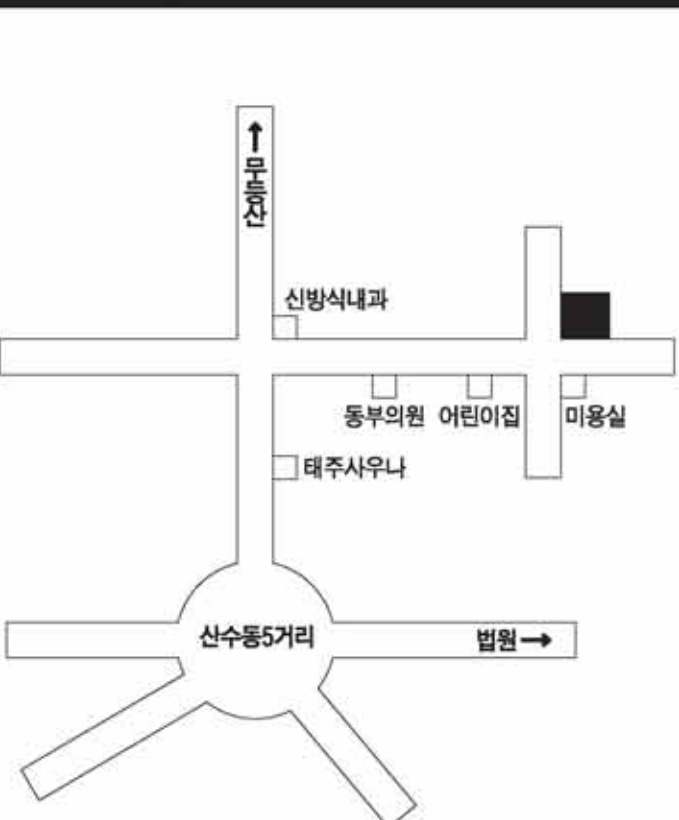
영광서 기부행위 의혹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영광경찰청은 3·11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영광 모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일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첩보가 접수된 데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산수동 남양빌라 지하상가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1억5천만원정도
- 노래방, 탁구장, 골프연습장, 호프, 독서실 등 적합
- 급매가 - 62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1대1 실전 사례 교육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